

보도 일시	2023. 2. 28.(화) 석간	배포 일시	2023. 2. 27.(월) 17:00
담당 부서	자본시장국	책임자	과 장 박재훈 (02-2100-2600)
<총괄>	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장원석 (02-2100-2606)

패스트트랙(증권위원장 긴급조치)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신속·엄정 대응하겠습니다.

※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 주요 논의내용 >

- ◇ 패스트트랙(증권위원장 긴급조치) 운영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였습니다.
 - '22년 금융위·금감원은 총 20건*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통보하여, 단기간 내 주요 혐의자를 다수 기소(검찰)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 * 연도별 패스트트랙(건): ('17) 8 ('18) 11 ('19) 7 ('20) 18 ('21) 9 ('22) 20
- ◇ 최근 신규 선정된 공동조사 2건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추가적인 공동조사 사건 선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주요사건에 조사역량을 보다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I 회의 개요

- 2.2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조심협 개요 >

- ◇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 (분기별 개최가 원칙이나, 필요시 수시 개최)

II 조심협 주요 논의내용

1 패스트트랙 운영현황 및 성과

□ 패스트트랙(증선위원장 긴급조치)이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별첨1]**

* '13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관계기관 합동)」에 따라 도입

○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금융위 또는 금감원 조사 진행중, 혐의자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검찰 수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신속히 검찰에 통보합니다.

□ '22년 한해 총 20건*(개인 77명, 법인 21개사)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하였고,

* 연도별 패스트트랙(건): ('17) 8 ('18) 11 ('19) 7 ('20) 18 ('21) 9 ('22) 20

○ 사건을 이첩 받은 남부지검이 단기간 내 주요 혐의자를 기소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 에디슨EV 등의 쌍용차 먹튀 사건, 카카오톡을 활용한 주식 리딩방 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주요사건이 포함됨

□ 향후에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주요사건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패스트트랙 제도가 취지에 따라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 '22년 주요 패스트트랙 사건 현황 **[별첨2]** >

구분 (조사기관)	조사 내용	수사 경과 (남부지검)
코로나19 진단 키트 사건 (금융위)	·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 국내 최초 美 FDA 승인 등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 취득	· 혐의자 기소 - 경영진 등 6명
에디슨 EV 쌍용차 먹튀 사건 (금감원)	· 인수 회사 경영진 등과 공모하여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부당이득 취득	· 혐의자 기소 - 경영진 등 10명
주식 리딩방 사건 (금감원)	· 카카오톡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선행 매매한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 매수 추천하여 부당이득 취득	· 혐의자 기소 - 주식리딩방 운영자 등

2

공동조사 추진방향

- '22.12월,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더욱 신속·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바 있으며,
 - * 공동조사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의 강제조사권(현장조사, 포렌식 등)과 금감원의 인력을 활용하여 양 기관 협업 하에 중요사건을 신속·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22.3월 첫 공동조사 실시)
- 이후 협의를 거쳐 2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 금일 조심협에서 2건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관간 협조사항을 논의하여,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조사를 마무리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 또한, 공동조사 사건 추가선정을 적극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간 역할 및 절차 구체화 등 관련 제도개선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조사 제도가 “조사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심리·조사기관 사건 현황 및 대응방향

- 지난 몇년간 우리 자본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계속해서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 * (예) 투자조합을 활용한 실질 주체 은폐, 차입금으로 기업 인수(이른바 ‘무자본 M&A’) 후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선행매매 등
- 금융당국의 사건처리 기간도 점차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 1건당 처리기간(금융위 조사 착수~조치 완료) : ('16) 200일 → ('22) 248일 (+24.0%)
- 이에 금일 조심협에서 심리·조사기관 사건처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조심협 활성화 등), 주요 사건*에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 예) 상승·조직적 세력이 연루되어 투자자 피해 확산 우려가 높은 사건 등

○ 아울러,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하며,

※ (참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발표 ('22.9.26일, 금융위 보도자료)

- 2.27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 과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 실무 준비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 **[별첨 1] 패스트트랙 제도(증권위원장 긴급조치) 개요**

☐ **[별첨 2] '22년 패스트트랙 조치 주요사례**

☐ **[별첨 3] '22년 하반기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

☐ **[별첨 4]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신고·제보 전화 : 02-2100-2608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담당 <총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책임자	과장	박재훈	(02-2100-2600)
		담당자	사무관	장원석	(02-2100-2606)
<공동>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	책임자	과장	정현직	(02-2100-2601)
		담당자	사무관	김관범	(02-2100-2596)
<공동>	금융감독원 기획조사국	책임자	국장	고영집	(02-3145-5550)
		담당자	팀장	조성우	(02-3145-5582)
<공동>	한국거래소 심리부	책임자	부장	이승한	(02-3774-9140)
		담당자	팀장	이종상	(02-3774-9142)

□ '13.4월 관계기관 합동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위 內 조사 조직이 설립되면서, 긴급·중대사건의 신속한 검찰통보를 위한 'Fast Track' 제도도 함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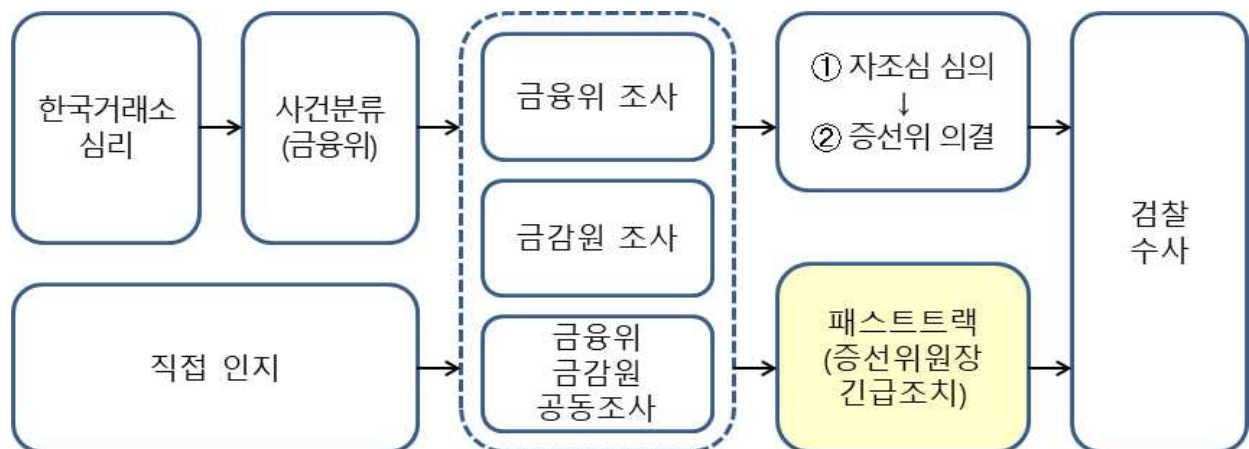
→ 금융위·금감원 조사 진행 중 Fast-Track 이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검찰에 신속히 이첩

< 관련 규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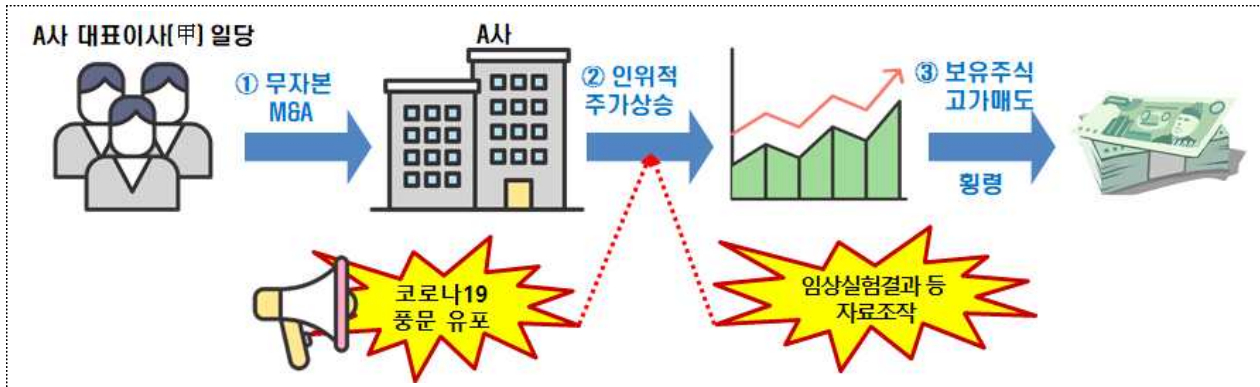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9조 제2항 (조사결과 처리)

- ②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선위위원장이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증선위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수사당국이 수사중인 사건으로서 즉시 통보가 필요한 사항
 3. 위법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되어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
 4. 위법행위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사항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증선위를 개최하여 처리할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 명백한 사항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프로세스 >



사례 1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허위 사실 유포



□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 풍문 유포 후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 취득

① 혐의자 甲 등은 코스닥 상장사인 A사를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

②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풍문 유포*로 A사 주가를 대폭 상승**시킨 후

* 코로나19 검체 수송 배지를 국내 최초로 美 FDA 허가를 받아 생산·수출 등

** ('20.3.19) 775원 → ('20.9.9) 9,140원 (+1,079%)

③ 既보유 주식 등을 매도하여 약 214억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한편,
A사 상장 유지를 위해 코스닥 상장사인 D사의 자금 132억원을 횡령

< 조사중 발견된 특이사항 >

◇ 혐의자들은 주가조작을 위해 코로나19 검체 수송 배지 임상실험 결과를 조작한 후 식약처 및 美 FDA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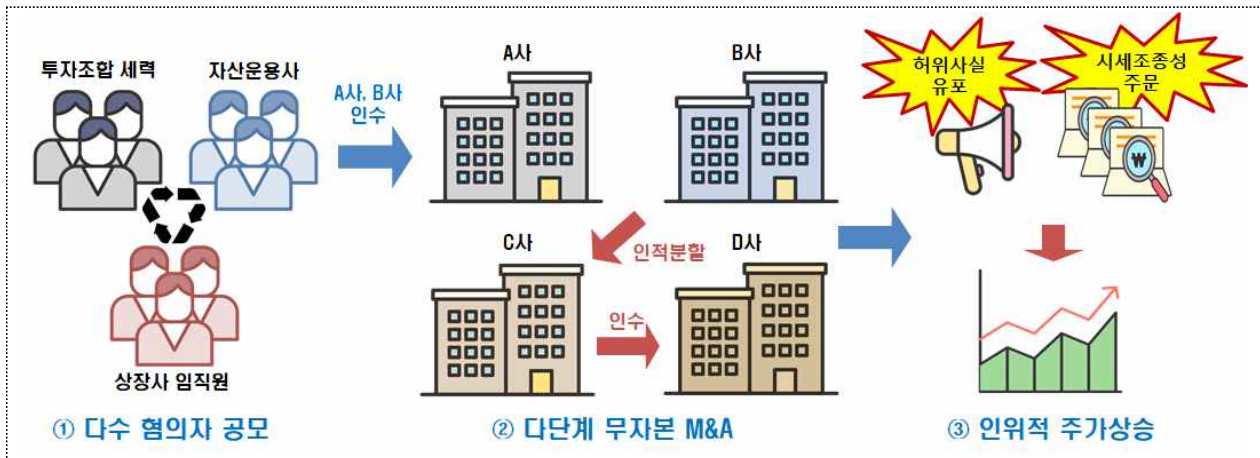
→ 금융위 조사과정에서 조작 서류를 美 FDA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증거 이메일 삭제 등 증거인멸

□ 증권선물위원장은 동 사건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 이첩

→ 남부지검은 A사 대표이사 등 혐의자 6명을 자본시장법 뿐만 아니라,
식약처 및 美 FDA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 방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 (수사 진행중)

◆ (투자자 유의사항) 테마주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는 소위 작전세력의
수익 실현과정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주가하락으로 심각한 투자손실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례 2 에디슨EV 등의 쌍용차 먹튀 관련 사건



□ 불공정거래 전력자인 甲 등은 인수회사 경영진, 자산운용사 임직원 등 다수와 공모하여 다수의 상장회사를 인수하고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여 주가를 부양하여 거액의 부당이득 취득

- ① (A사) 다수 투자조합 등을 통해 인수 후 소위 “상한가 만들기” 시세 조종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주가부양 후 부당이득 취득 등
- ② (B사) 투자조합을 통해 인수 후 무형자산 평가과정의 위계 및 호재성 정보 유포로 주가부양 및 부당이득 취득 등
- ③ (C사) 대량의 상한가 매수 주문 및 통정매매로 주가상승 견인 등
- ④ (D사) C사를 통해 D사를 인수하면서 시가관여주문(881회) 등 총 1,053회의 주문으로 시세조종 등

□ 증권선물위원회는 동 사건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 이첩

→ 남부지검은 A사 대표이사 등 경영진 4명 및 자금조달책 6명 등을 기소 (수사 진행중)

◆ (투자자 유의사항)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등이 상장사를 인수 후 주가부양을 위해 신규사업 관련 허위 공시, 뉴스 등을 남발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 투자자분들은 투자 대상기업의 재무상황, 기존 사업 업황, 공시 진위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3

종목 추천을 빙자한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



□ 카카오톡 리딩방, 유튜브 방송을 활용한 선행매매 행위

- ① 甲(리딩방 운영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개설한 주식 리딩방을 통해 ①선매수 → ②리딩방 회원 매수추천 → ③선매도 → ④회원 매도추천 패턴 반복 등 선행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
- ② 乙(리딩방 운영자)는 A사 대주주 보유주식의 고가 매수를 지원하기 위해 카카오톡 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매수를 유인
- ③ 丙(주식 유튜버)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서 본인명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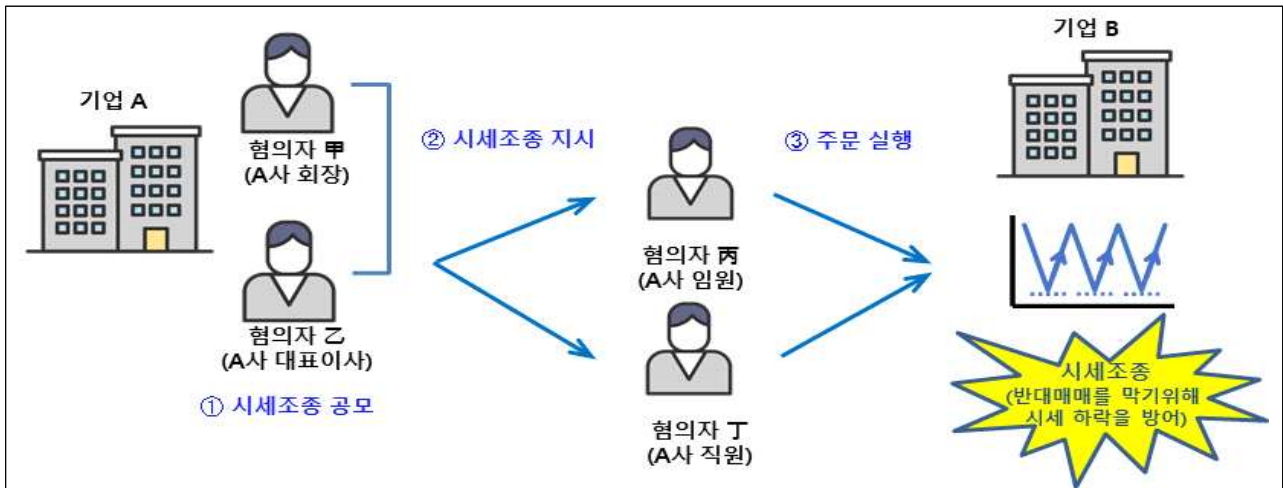
□ 증권선물위원회는 동 사건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 이첩

→ 남부지검은 선행매매 수법으로 3.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甲을 구속 기소 (기타 사건은 수사 진행중)

◆ (투자자 유의사항)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대상이 되어 거액의 투자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자기도 모르게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례 1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대주주의 주가조작



□ A사 회장은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임직원에게 시세조종 지시

① A사 회장 甲은 운영자금 마련 등을 위해 대출을 받으며 본인 소유 상장사 B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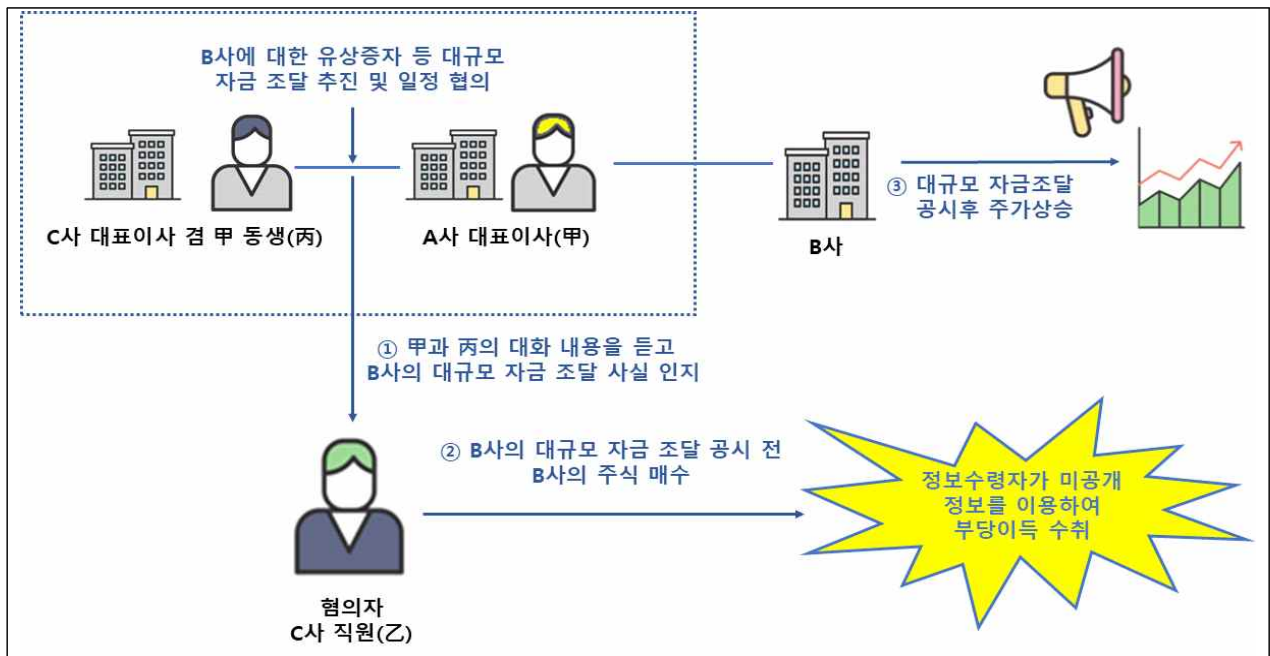
- 글로벌 증시 하락의 영향 등으로 B사의 주가가 급락하자, A사 대표이사 乙과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B사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모의

② 乙은 A사의 임직원인 丙 및 丁에게 A사 고유자산을 이용하여 B사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주문(고가매수, 종가관여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

□ 증권선물위원회는 동 사건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 등

◆ (투자자 유의사항) 주식 담보대출이 과다하면 반대매매로 인한 대량 매도, 혹은 반대매매 방지를 위한 인위적인 주가조작 이후 급격한 가격하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2 계열사 직원이 업무 중 우연히 알게 된 미공개정보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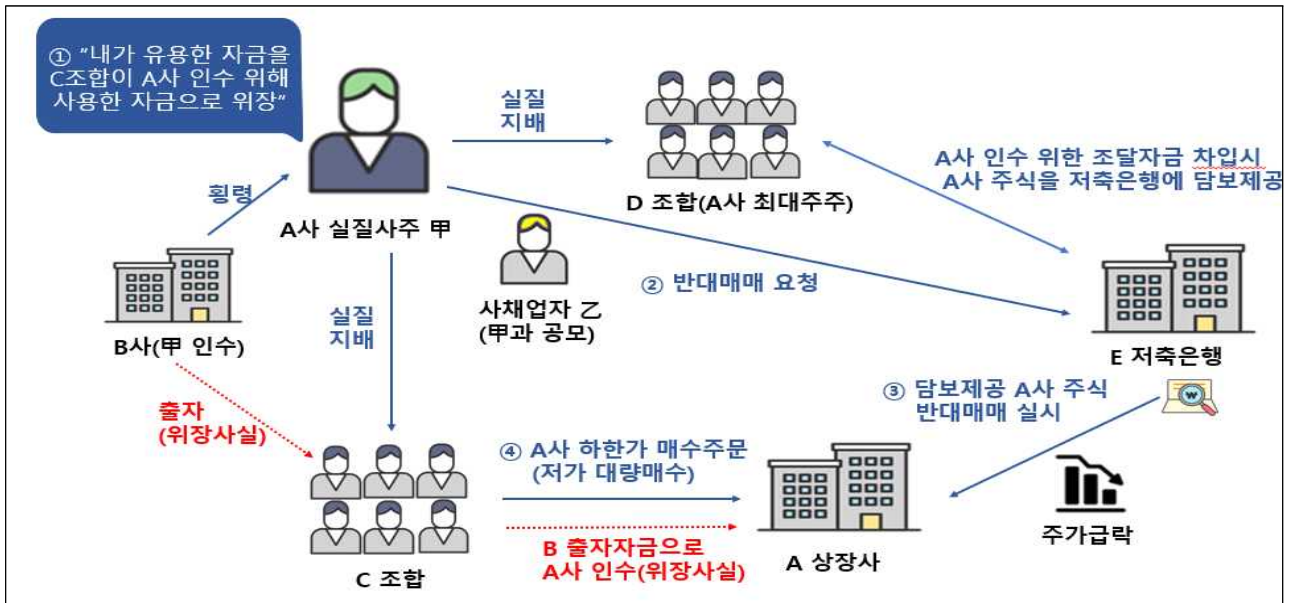


- 계열사 직원 乙은 업무중 우연히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수
- ① 상장사 A의 대표이사 甲은 A사가 상장사 B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B사의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금조달 추진 관련 업무 협의
 - ② 비상장기업 C의 직원 乙은 丙이 운영하는 C사의 직원으로
 - 甲과 甲의 동생 丙이 C사 사무실에서 B사의 대규모 자금조달과 관련해 대화하는 것을 듣고 동 정보를 지득
 - ③ 乙은 B사의 자금조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공시 후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B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여 부당이득 취득

□ 증권선물위원회는 동 사건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통보

◆ (투자자 유의사항) 우연히 알게 된 정보일지라도 상장회사(계열회사 포함) 임직원이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3 대주주 횡령·배임 은폐를 위해 기업 인수를 가장한 사례



□ A사 실질사주 甲은 횡령사실 은폐를 위해 A사 주식 부정거래(고의 반대매매)

① 甲은 인수한 B사의 자금을 임의로 유용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 B사가 자신이 실질 지배하는 C조합에 출자하고, 동 자금으로 상장사 A의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가장할 계획을 수립

② 甲은 C조합이 A사 주식을 저가에 대량 매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사채업자인 乙과 공모하여,

- 자신이 지배하는 또 다른 D조합을 통해 동 조합이 E저축은행에 담보로 기제공하고 있던 A사 주식을 반대매매해줄 것을 저축은행에 요청하고

③ C조합은 저축은행이 반대매매 주문을 제출하기 전 조합명의 계좌를 통해 사전에 하한가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저축은행 반대매매 수량을 장내에서 즉시 저가 매수하였음

□ 증권선물위원회는 동 사건을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등

◆ (투자자 유의사항) 배임·횡령사실 은폐를 위해 자본시장 신뢰에 반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가급락을 유도하여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부정거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4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

※ 일반적으로 ‘시장감시·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고발·통보(증권위) → 수사·기소(검찰) → 재판(법원)’ 순으로 진행

1. 시장감시 현황 (거래소)

□ ‘23.1월에 비해 ‘23.2월에 시장경보 증가, 예방조치 건수는 감소했습니다.*

* 시장경보 : 단기급변 및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감소

예방조치 : 이상거래(대량·반복적인 허수주문·단주매매 등) 계좌 감소

구 분		‘22.11월	‘22.12월	‘23.1월	‘23.2.22일
시장경보	투자주의	147건	129건	132건	133건
	투자경고	13건	12건	6건	13건
	투자위험	1건	1건	1건	0건
	소 계	161건	142건	139건	146건
예방조치 (서면·유선경고 등)		417건	592건	473건	318건
테마주 집중 모니터링		1개 테마	0개 테마	1개 테마	0개 테마

2. 심리 현황 (거래소)

□ ‘23.2월,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19건의 심리를 진행중입니다.

○ 특히, 순환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M&A 관련 부정거래 사건 등에 대해 거래소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22.11월	‘22.12월	‘23.1월	‘23.2.22일
신규착수	14건	16건	6건	12건
종결	15건	15건	9건	6건
진행중	15건	16건	13건	19건

3. 조사·조치 현황 (금융위, 금감원)

□ 금융위·금감원은 138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첫 과징금 제재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었으며, 증선위 심의 프로세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22.12.1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에 따라 제재 조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23.2.9일,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22.12월 증선위 제재를 받은 5개 법인명 공개

		'22.11월	'22.12월	'23.1월	'23.2.22일
조 사	진행중	160건	154건	148건	138건
	신규 착수	10건	5건	0건	16건
조 치	종결	12건	4건	5건	13건
	고발	1명	1명, 1개사	6명, 4개사	8명, 2개사
	통보	8명, 10개사	5명, 3개사	24명, 12개사	15명, 1개사
	과징금	5명, 7개사	3명, 1개사	2명, 1개사	3명, 6개사
	과태료·주의·경고	16개사	5개사	1개사	-
	합계	14명, 33개사	9명, 10개사	32명, 18개사	26명, 9개사